

일파만파로 번지는 ‘사건 브로커 수사’

코인 사기 피의자에 18억 상당 금품 받고 검·경 로비에 인사 개입까지 광주지검, 검찰·경찰 등 압수수색만 7곳... 전·현 고위경찰 등 6명 구속 수사 칼날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 속 지자체·공공기관 불똥 튀까 촉각

검·경 인맥을 내세워 ‘사건에 도움을 주겠다’며 사기 용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 브로커’ 수사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관 한 명과 전직 고위경찰, 간부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검찰의 검·경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만 광주지검, 광주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7곳에 달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주경찰청 수사과와 정보과에 수사관을 보내 3시간여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같은 시간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와 광주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건 브로커 A(62)씨와 관련된 비리 혐의 입증에 위한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브로커 A씨는 20여년전 수사기관 간부, 지역 유력 인사 등과 친분을 내세우며 검·경 수사 및 인사 비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코인 사기 용의자에 대한 ‘수사 무마’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들이 코인사기 용의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검·경 관계자를 대상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단행한 이번 압수수색 대상 경찰관은 총 4명으로 A씨와 연관이 있는 간부급이다. 이 중 3명은 지난 2020년께 광주시 광산구 수사부서 책임자와 담당자 등으로 A씨가 구속 재판중인 코인사기범 관련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A씨의 청탁을 받은 이들이 사기 용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광주경찰청 정보계 인사로 인사 비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압수물품에 특

정 시기 경찰인사 자료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건브로커 A씨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총 3명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A씨와 공범 한 명은 지난 2020~2021년 사이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 B씨 측으로부터 검경 수사 로비 등을 명목으로 고급 외제차 한 대를 포함해 18억 5000만원 상당의 금

품을 받아 쟁기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2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검·경 관계자와 A씨의 인사개입에 연루된 경찰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 구속된 피의자는 현재 광주지검 산하지청 검찰 수사관 1명과 전직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경무관 1명, 전남경찰청 퇴직 경감 등 3명이다.

검찰 수사관과 전직 경무관은 B씨 사건과 관련

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전남청 퇴직 경감은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광주지역 경찰 압수수색 이전에도 알려진 압수수색만 목포지청, 광주지검, 목포경찰서, 서울경찰청 등 총 7곳에 달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인사와 수사 무마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A씨와 지인들이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공공기관까지 불똥이 튀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씨와 지인이 테크사업 등 설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성 정체성 지닌 남성 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광주지법 행정1부 판결

여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남성에게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신체등급 1급을 받고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이듬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돼 병역을 마쳤다.

제대 후 A씨는 2019년에 처음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21년 정신과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호르몬 요법 등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았다.

지난해 12월 A씨는 각종 진료기록, 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냈다.

병무청은 A씨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별도 위탁검사를 실시했다.

위탁검사결과 임상적 진단 부분에서 성별 불일치감, 여성으로 대우받고 싶어하는 욕구 등의 A씨의 심리평가보고서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병무청은 신체등급 3등급으로 판정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나는) 고도의 성별불일치로서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며 “사회·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받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며 다른 성전환자들에게는 훈련을 면제하는 처분을 한 점으로 미뤄 평등의 원칙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병무청은 임상적 진단이 추정에 불과하다”고 A씨의 진단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A씨가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2년 이상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가려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백일장 대회 시작합니다~”

11일 광주시 동구 서남동 인쇄거리 일대에서 열린 ‘2023 서남동 인쇄문화마켓’ 행사에서 시민들이 ‘백일장 대회’ 등 행사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교감 징계는 정당

광주고법 “징계 과하다 볼 수 없어” 권책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기각

법원이 여수해양과학교 현장실습생 고(故) 홍정운 사고와 관련, 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고법수석판사 김성주)는 여수해양과학교 교감을 지낸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권책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이 학교에 교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1년 10월 6일 홍(당시 3년)군이 현장 실습을 나가 잠수작업 중 숨졌다. 당시 홍군은 안전교육 없이 홀로 선박 밑의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전남교육청은 특정감사를 거쳐 A씨에게 권책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지난해 3월 교장으로 승진한 점으로 미뤄 징계로 인한 재산상·신분

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정근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다”며 재판을 할 이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교감으로서 현장실습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실하게 심의한 점, 당시 학교장이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징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 환경의 안전성 확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등 공익을 위해 A씨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싸움 제지하려던 교사 고소한 학부모 무고 혐의 고발키로

전국 초등교사노조

전국 초등교사노조가 학생들 간 싸움을 제지하려 책임을 넘어뜨린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초등교사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초등학교 A교사를 아동학대로 혐의로 무고한 학부모를 14일 광주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학생들 간 싸움을 제지하다 교실 책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이후 1년여 수사를 받은 A씨는 지난 4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학부모가 지난 5월 31일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전국의 교사 등이 검찰에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며 탄원서 1800여장을 보내기도 했다.

학부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이를 대신 판단해 달라는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는데, 역시 기각됐다.

학부모는 이와 별도로 A교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명목으로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이 또한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든든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